

挺身隊진상」얼버무린 調査

日정부 발표 과정과 문제점

6일 발표될 日本정부의
종군위안부(挺身隊) 관련
조사와 완전히 끝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최
종결하는 것은 일단 피하
를 발표하는 것은 일단 피하
가 3일 확정된 발표문에
따르면 종군위안부의 모집
로 보인다.

과 위안소의 설치 증축 경
영감독 위생관리 신부총발
급등에 대한 舊日本軍의
관여가 인정된다는 것이
상의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종군
위안부 모집과정의 강제징
집여부에 대한 일본 자체
의 규명은 향후의 과제로
남게 됐다. 종군위안부문제
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차
럼 미흡한 상태가 앞으로
도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
에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신대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강제징집
여부가 이처럼 애매한 상
태로 남게 되는 것은 한국
측에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실제로 강제징집이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일이 한국측으로
떠넘겨질 수도 있기 때문
이다.

日정부는 이번의 발표가
중간발표의 성격을 갖고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韓日양국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일본정부의 이번 조사는 지난 90년 5월 盧泰愚 대통령의 訪日 이후에 시작됐다. 그후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6개 유관부처를 대상으로 이들 부처가 보관중인 관련자료 중심의 조사를 벌여왔다. 그결과 방위청(70건의무선(52건) 무부선(1건)후생청(4건) 등 4개 부처에서 모두 1백27건의 관계자료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들 자료를 내용별로 보면 위안부의 모집(4건) 위안소의 설치(4건) 중첩(9건) 경성갑동(35건) 위생관리(24건) 신부출발및 기타(62건)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경우도 있음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분야에 대한 舊日本軍의 관여가 인정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문은 위안부의 강제집행어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금까 지 발견된 자료 가운데 강제집행을 일삼았던 것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제까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며 자료가 나온대로 조사할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평소 자세에 비추어 볼때 일본부정부가 후속조사를 성실히 계속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정부가 조사를 계속할 것이냐의 여부는 한국측의 향후 태도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군위안부들 日帝피해자들의 문제는 두가지 지소를 갖는다. 그것은 상규명과 후속 조치다. 한편 측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일본측은 그것을 「돈을 바내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지 상규명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무게가 정리하기 위해

013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韓日양국의 노력은 계속돼야

문제는 6년째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정요인 미비, 플랫폼 다고 보고 있으면, 스그라나 인도적 경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출자의 기금을 창설, 한국에 거주하는 前총독국인보들의 생활에 충당토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대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세가지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간소피해자와 일본정부 △피해자와 한국정부의 관계다.

이 가운데 양국정부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65년의 협정으로 끝났다는 일본측의 입장을 반박하기에는 한국정부가 떳떳하지 못한 사실이다.

피해자와 일본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최근 일부 피해자들에게의 해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의 체질도 볼때 이들 재판은 앞으로 몇년이 걸릴지 모르며, 설령 재판이 끝난다 하더라도 일본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해 한국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왔던가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65년의 협정에 따라 일본은 6년 동안 구, 피해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극히 일부에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한국정부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戰後 처리가 미흡하다는데서 근본 문제가 출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정부가 면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일본의 한국인사회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東京)李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속조치에 관해선도 이
번의 발표문에는 언급이
없다. 그것은 일본정부가
△양국정부 사이의 협

